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석허가 신중

여론추이 보아가며 신청할 듯 ... 조폭 두목 전달된 돈은 합의금 강조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 등 <보복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월5일 “앞으로 재판절차를 지켜볼 뿐 특별히 내놓을 입장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화 관계자는 “보석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도 여론의 추이를 보아야 하고, 법원측이 어떻게 판단할 지도 생각해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보석신청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결과 김승연 회장 개인 돈 1억1000만원이 사건 직후 폭행에 동원됐던 맘모파 두목 오모씨에게 제공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회장 비서실장과 한화리조트 감사 등이 검찰수사에서 그런 내용을 진술했다”고 전하고 “그 돈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밝혀진 것처럼 비서실장이 몇차례 나누어서 준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준 합의금 용도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오씨가 합의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청했고 이에 김승연 회장 개인 돈이 건네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런데 오씨가 이것을 합의금으로 쓰지 않고 그대로 도피했으니 말하자면 오씨가 횡령을 한 셈이 아닌가 추측한다”면서 “따라서 검찰측도 관련자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합의금 지급 등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추후 공탁금 9000만원을 별도로 내놓은 것 아니냐”고 말하고 “우리로서는 검찰 진술에서 오씨가 배달사고를 내고 도피한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던 것으로 안다”고 거듭 전하면서 도피자금 제공 등의 혐의가 없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다른 관계자는 오씨의 도피 등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여론의 시선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한화그룹은 앞으로 1심 재판에서 김승연 회장에 선고될 형량 등에 촉각을 세우면서 향후 감당할만한 수준의 판단이 나오도록 그룹 경영에 큰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눈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김승연 회장에게 적용된 폭행, 흥기 등 상해를 포함한 6가지 혐의 등 범죄사실 진위를 놓고 검찰측과 빈틈없는 법정공방을 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체계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승연 회장이 직접 청계산에서 흥기를 휘두르거나 폭행을 지시했는지 여부, 다른 폭행 가담자들과의 역할관계 등이 형량 결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정공방 대비에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05>